

# ‘휴전 4년만에’ 시리아 내전 재점화...반군, 주요 도시 점령

### 이슬람 무장조직 HTS, 알포레·이들리브주 장악 미 테러단체 지정 반발 “미·유럽 안전 해치지 않아”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된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시리아 내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반군이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알레포를 깜짝 장악한 데 이어 북서부 이들리브주 주요 거점을 속속 접수하면서 2011년 이래 30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막대한 난민을 양산한 시리아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반군이 지난 달 27일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기습 공격에 나선 이래 거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파죽지세로 진격하면서 그 주축 세력인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삼(HTS)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HTS는 2011년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창설된 알누스라 전선(자카트 알누스라)을 전신으로 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저항하는 무장 단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센 세력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다만, 설립 초기에는 시리아를 독재자 아사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보다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서의 정체성에 방점이 찍힌 것처럼 비춰졌다고 BBC는 설명했다.

이 단체의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는 2016년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끊으면서 과격한 ‘글로벌 지하디스트’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변신을 꾀했다.

그는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면서 시리아를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리아내 유사한 반군 분파를 규합해 새로운 조직 HTS를 출범시킨 이래 그동안 아사드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의 중심점 역할을 해왔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범아랍 영문 뉴스 매체인 ‘더 뉴 아랍’에 따르면 HTS의 완전한 이름인 하야트타흐리르알삼은 아랍어로 ‘시리아 해방 의회’(Assembly for the Liberation of Syria)를 의미한다.

HTS는 설립 이후 반군 장악 지역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州)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친(親)알카에다 세력을 물리치면서 시리아구원정부(SSG)라는 이름으로 이들리브 상당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

현재는 역시 아사드에 대항하는 친(親)타키 반군 시리아국가군(SNA)과 연계된 시리아임시정부(SIG)와 이들리브 일부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데, 두 세력은 역내 주도권과 아사드 정권에 저항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를 놓고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시리아 내전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화이트 헬멧 대원들이 포격에 무너진 건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HTS는 지하디스트로서의 정체성은 버렸지만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알줄라니는 HTS의 통치는 민주주의가 아닌 이슬람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그러나 HTS의 통치는 IS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근본주의적 이슬람교리를 따르는 통치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더 뉴 아랍은 전했다.

실제로 HTS는 여성이 하잡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금연을 강요하지 않는 등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펴고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거

리에서 풍속 경찰의 순찰도 중단했다고 한다.

미국은 그러나 HTS의 목표가 시리아의 민주화가 아닌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보고, HTS 지도부 역시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며 HTS를 테러 조직 명단에 올린 상태다.

알줄라니는 이와 관련, 2021년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테러 단체’ 딱지를 계속 붙이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더 뉴 아랍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가자 맹폭 민간인 200명 ‘참변’

### 빵집선 어린이·여성 3명 압사

이스라엘이 북부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사이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방위 폭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참변이 속출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구호 차량을 상대로 약탈이 이어지자 유엔이 구호품 전달 중단을 선언하면서 ‘최후의 생명줄’마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미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 관계자를 인용해 전날 하루 동안에만 북부 지역에서 200여명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베이트 라히야에 위치한 카말 아드완 병원의 한 관계자는 CNN에 가자지구 북부에서 2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 5채가 폭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습으로 100여명 이상이 건물 잔해에 깔렸고 구조된 사람은 1명뿐이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참사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서는 가자 중심부의 한 빵집에서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이 압사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식량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빵을 구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린 탓이다.

유엔은 가자지구가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공공질서가 무너지면서 기아가 급증하고 역탈도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구호품 전달 차량에 대한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요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전달도 결국 중단됐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지난 몇 달간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과하는 길이 안전하지 못했다”며 “기아가 극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UNRW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과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식량 전달 트럭이 약탈당했고, 지난달 16일에는 무장경단에 의해 구호 트럭 10여대가 공격받기도 했다.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에 돌렸다.

그는 이스라엘 당국을 향해 “구호품이 안전하게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0일 하마스와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킵친(WCK) 직원을 공격해 숨지게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에서는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회담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 폭스바겐 노조, 독일 전역서 경고파업

### “임금 삭감·구조조정 반대”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일(현지시간) 독일 전역에서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산별노조IG메탈(금속산업노조)의 수석협상가 토르스텐 그뢰거는 1일 성명에서 “대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력하게 이어질지는 사측에 달렸다”며 “필요하다면 이번 파업은 폭스바겐 역사상 가장 힘든 단체교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과 IG메탈의 단체교섭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2018년 이후 폭스바겐 국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첫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5만여 명이 참여했다.

경고 파업은 독일 사업장에서 노사 교섭 도중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가 보통 수시간 동안 벌이는 단기간의 정의 행위로, 본격적인 파업을 예고하는 의미다.

국내의 높은 제조 비용, 전기차로 전환 지연,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폭스바겐은 유럽의 자동차 수요 감소

에 맞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비용 절감과 수익 제고를 위해 10% 임금 삭감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독일 내 공장 10곳 중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매체들은 폐쇄되는 공장 규모에 따라 독일 직원 12만명 가운데 최대 3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한다.

노조는 지난주 2025년과 2026년 보너스를 포기하는 등 15억 유로(약 2조 2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회사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왔으며 “경고파업이 고객, 파트너와 산업 공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며 서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조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오는 9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트럼프 순차적 ‘관세 폭탄’ 중국, 2026년까지 3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보편 관세 대신 특정 타깃을 겨냥해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 보고서를 인용해 관세 수입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11.7%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2023년 수입 기준 가중평균)가 내년 7월께 20.2%로 오르고, 2026년 3월께 28.2%에 이어 2026년 9월께 36.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예측 불가능성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대중국 관세 수준이 3단계 인상을 거쳐 현재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잠옷·볼펜 등 소비재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해 관세 수준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제안했던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예상했다.

이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2026년 9월까

지 자본재·중간재 등 타깃이 된 상품군에 추가 관세를 부과, 현행 25%인 이들 제품의 관세 수준을 75%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이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현행 1.2%에서 2026년 3월과 9월 각각 2.6%, 3.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으며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간재·자본재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은 현행 2.6%에서 내년 7월 3.8%, 2026년 3월 6.2%, 2026년 9월 7.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치 자체는 중국보다 낮지만 2년 뒤 현재의 3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통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이 경우 전 세계 상품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현행 21%에서 18%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가운데 83%가 타격을 입고, 캐나다·멕시코 등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